

건설동향브리핑

제414호 (2013. 6. 3)

■ 경제 동향

- 3월 국내 건설 기성 2.9% 증가, 3개월 연속 오름세

■ 정책 · 경영

- 공공공사 현장 3곳 중 1곳에서 공기 연장 발생
- 공기 연장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관련 제도 개선 필요

■ 정보 마당

- 미국 공공공사 발주 제도의 변화 현황과 시사점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甲’옷을 벗어던지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3월 국내 건설 기성 2.9% 증가, 3개월 연속 오름세

- 최근 건설 기성 회복세 일시적, 건설 수주 위축으로 하반기 재침체 가능성 -

■ 민간 부문 호조로 3개월 연속 증가

- 2013년 3월 건설 기성은 공공 부문은 부진했으나, 민간 부문이 호조를 보여 전년 동월 대비 2.9% 증가한 7조 5,966억원을 기록, 3개월 연속 증가함.
 - 공공 기관 기성은 전년 동월 대비 13.5% 감소한 2조 5,271억원을 기록, 지난 2012년 10월부터 시작된 감소세를 지속함.
 - 민간 기관 기성은 전년 동월 대비 17.2% 증가한 4조 7,900억원을 기록,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함.

■ 건축 기성 호조, 토목 중에서는 플랜트 증가

- 건축 기성의 경우, 주거용과 비주거용 모두 호조를 보여 전년 동월 대비 6.5% 증가,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함.
 - 주거용 건축 기성은 지난 2011년 3월이나 2012년 3월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인 2조 3,192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12.9% 증가함.
 - 비주거용 건축 기성은 전년 동월 대비 0.2% 증가한 2조 588억원을 기록,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마감함.
 - 한편, 토목 기성은 플랜트가 47.9% 증가해 호조를 보였으나, 일반 토목과 전기 기계가 부진해 전년 동월 대비 1.8% 감소한 3조 2,186억원을 기록함.

<2013년 3월 건설 기성>

(단위 : 십억원, 전년 동월비 %)

구분	총액	공종별							발주 기관별			
		건축 공사			토목 공사				공공 기관	민간 기관	민자	외국 기관
		주거용	비주거용		일반 토목	전기 기계	플랜트					
2013. 3월	7,596.6	4,378.0	2,319.2	2,058.8	3,218.6	1,630.9	255.0	1,260.6	2,527.1	4,790.0	269.5	10.0
증감률	2.9	6.5	12.9	0.2	-1.8	-21.9	-3.7	47.9	-13.5	17.2	-23.8	-59.6
2013.1~3월	20,071.8	11,356.2	6,028.4	5,327.8	8,715.6	4,418.0	1,006.7	3,118.8	6,932.2	12,388.4	721.1	30.1
증감률	5.1	4.6	13.6	-3.9	5.6	-14.8	64.9	38.6	-6.1	14.8	-15.2	-59.9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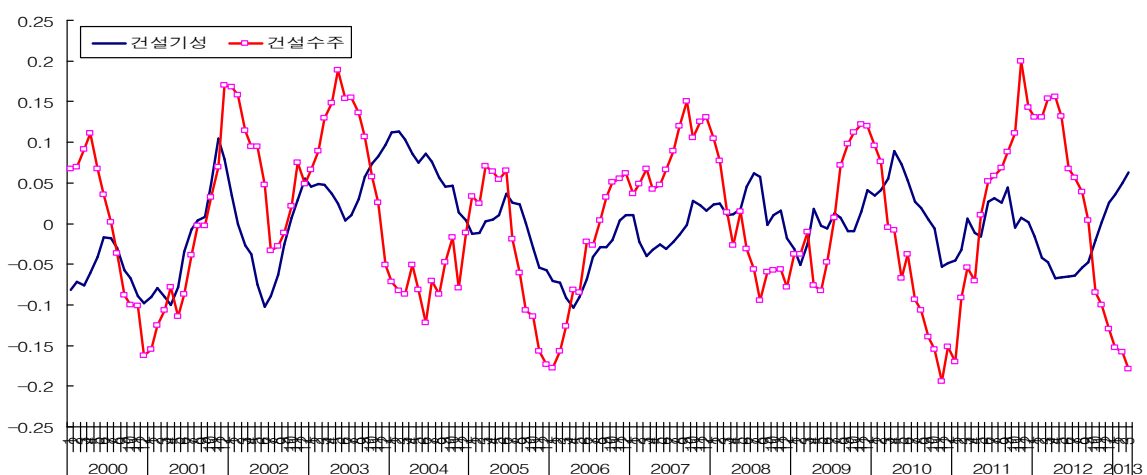
■ 최근 회복세는 2011년 하반기~2012년 초반에 일시 증가한 수주 때문

- 최근의 건설 기성 회복세는 2011년 8월부터 2012년 2월까지 7개월 간 일시적으로 증가한 건설 수주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건설 수주는 8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해 장기간 침체를 보이고 있는 반면, 건설 기성은 최근 3개월 연속 증가하며 반등함.
 - 수주와 기성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HP(Hodrick Prescott) 필터를 활용, 순환 변동치를 살펴본 결과, 최근의 기성 증가는 지난 2011년 하반기부터 2012년 상반기에 일시적으로 증가한 수주 물량의 기성 진척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건설 수주는 2011년 8월부터 2012년 2월까지 7개월 연속 증가했는데, 최근의 기성 회복은 당시 현저하게 증가한 주거용 건축과 발전 설비 수주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최근 흐름 2004년 및 2008년과 유사, 수주 회복 지연시 하반기에 재침체 가능성

- 최근 건설 수주와 건설 기성의 서로 상반되는 움직임은 지난 2004년 및 2008년과 유사한데 당시와 마찬가지로 향후 건설 기성의 증가세가 둔화 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건설 수주가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수주 감소세가 멈추지 않을 경우 하반기에는 건설 기성도 재침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건설 수주 및 건설 기성 순환 변동치>



주 : 계절 조정된 시계열을 로그화하여 HP 필터로 필터링 수행, 7개월 이동 평균하였으며, 기성과 수주 함께 보기 위해 기성 변동 폭을 2.5배 확대함.

박철한(책임연구원 · igata99@cerik.re.kr)

공공공사 현장 3곳 중 1곳에서 공기 연장 발생*

- 공공공사의 공기 연장 및 계약 금액 조정 관련 실태 조사 결과** -

■ 발주기관의 계약 금액 조정 승인, 29.9%에 불과

- 최근 3년 간 수행된 공공공사의 총 821개 현장 중에서 발주기관의 귀책 사유로 계약 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254개 현장으로, 공기 연장이 발생한 비율은 평균 30.9%
 - 간접 노무비, 제경비 등 시공자의 비용 손실이 발생한 244개 현장 중에서 시공자가 계약 금액의 조정을 청구한 비율은 73.0%(178개 현장)이지만, 실제로 계약 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는 29.9%(73개 현장)에 불과
 - 건설업체의 비용 손실분에 대한 계약 금액의 조정을 인정받지 못한 사유로는 ‘발주기관의 계약 금액 조정 거부’가 69.1%로 가장 높았고, ‘시공 계약자의 계약 금액 조정 미청구 및 자체 포기’가 26.7%, ‘기획재정부(총사업비 관리 대상)의 반려’가 10.8%를 차지

<발주기관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공공공사 공기 연장 및 계약 금액 조정 실태>

(단위 : 개 수, %)

건설업체	전체 공공공사 현장 수 [A]	공기 연장 발생		비용 손실 발생		계약 금액 조정 청구		계약 금액 조정 승인		
		현장 수 [B]	비율 [B]/[A]	현장 수 [C]	비율 [C]/[A]	현장 수 [D]	비율 [D]/[C]	현장 수 [E]	비율 [E]/[D]	비율 [E]/[C]
가	32	13	40.6	13	40.6	13	100.0	4	30.8	30.8
나	115	40	34.8	36	31.3	27	75.0	15	55.6	41.7
다	53	20	37.7	17	32.1	10	58.8	10	100.0	58.8
라	5	2	40.0	2	40.0	2	100.0	2	100.0	100.0
마	78	28	35.9	28	35.9	28	100.0	2	7.1	7.1
바	25	11	44.0	11	44.0	3	27.3	2	66.7	18.2
사	130	40	30.8	40	30.8	29	72.5	7	24.1	17.5
아	160	34	21.3	34	21.3	24	70.6	8	33.3	23.5
자	42	8	19.0	8	19.0	8	100.0	8	100.0	100.0
차	74	21	28.4	21	28.4	12	57.1	7	58.3	33.3
카	22	8	36.4	8	36.4	4	50.0	2	50.0	25.0
타	25	10	40.0	10	40.0	10	100.0	4	40.0	40.0
파	54	16	29.6	13	24.1	5	38.5	2	40.0	15.4
하	6	3	50.0	3	50.0	3	100.0	0	0.0	0.0
계	821	254	30.9	244	29.7	178	73.0	73	41.0	29.9

* 본고는 ‘공공공사 공기 연장 실태 조사와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2013. 5)의 일부 요약이며, 전체 자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시공 능력 평가 50위권 건설업체 중 설문에 회신한 14개 업체가 보유한 총 821개의 현장 사례 조사 결과임. 설문 대상 및 응답 업체 수가 한정적인 이유로, 전체 공공공사의 실태를 반영한 통계치가 아닐 수도 있으며, 설문 응답 해석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 발주기관의 예산 부족으로 인한 공기 연장이 과반수

- 토목 공종에서 발주기관의 예산 부족으로 인한 공기 연장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
 - 공기 연장이 발생한 254개 현장 중에서 ‘발주기관의 예산 부족’ 사유가 48.8%(124개 현장), ‘사업 계획 및 설계 변경’이 23.6%(60개 현장), ‘용지 보상 지연’이 12.2%(31개 현장), ‘인·허가 및 승인 지연’이 5.9%(15개 현장)를 차지
 - 공기 연장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공종은 토목 공사로 그 비중이 73.2%(186개 현장)에 달하며, 건축 공사가 18.5%(47개 현장), 산업환경 공사가 7.5%(19개 현장)를 차지
 - 공기 연장이 발생한 공공공사 현장 중 장기계속공사 계약은 49.2%(125개 현장), 계속 비공사 계약은 50.8%(129개 현장)를 차지
- 공기 연장에 따른 발주기관과의 협의 실태에 관한 조사에서는 설문 응답 건설업체의 78.6%가 ‘인력 투입 계획을 제출하고 협의한다’라고 답했고, ‘인력 투입 계획을 제출하지만 협의하지 않는다’가 14.3%, ‘제출하지 않는다’가 7.1%를 차지함.
 - 상당수의 건설업체가 소요 인력 조정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 투입 계획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협의함에도 불구하고, 공기 연장에 따른 계약 금액의 조정이 원만하게 수행되지 않고 있음.
 - 인력 투입 계획과 같은 서류 제출이 요식적인 행정 행위에 그치고 있으며, 실질적인 공기 연장에 따른 인력 조정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됨.

■ 공공공사의 계약 금액 조정 관련 제도 개선 시급

- 설문 응답 건설업체의 대다수는 공기 연장에 따른 실비 보상과 관련한 현행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과 함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 공기 연장에 따른 보상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설문 응답 건설업체의 50%가 ‘낮다’로, 42.9%가 ‘매우 낮다’로 응답하여, 회의적인 인식이 지배적임.
 - 설문 응답 건설업체들은 공기 연장에 따른 보상 관련 제도의 보완이 시급한 영역으로 ‘총사업비관리지침의 개정’, ‘계속비 공사 계약의 확대 및 장기계속 공사 계약의 폐지’, ‘민간 선투자/선시공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 등을 꼽고 있음.

김원태(연구위원 · wontkim@cerik.re.kr)

공기 연장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관련 제도 개선 필요*

-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을 통한 추가 간접비 지급 근거 마련 시급-

■ 발주기관의 보상 책임 회피로 계약 당사자 간 갈등 심화

-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비와 제경비는 실비 범위 내에서 보상하도록 「국가계약법」과 계약 예규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일선 건설 현장의 발주기관은 여전히 공기 연장에 따른 보상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함.
 - 발주기관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공기 연장시에도 다수의 공공 발주기관은 선례 부재나 지급 근거 미흡 등의 이유로 시공자의 보상 금액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의 보상과 관련한 분쟁의 주요한 원인은 총사업비관리제도의 문제점, 장기계속공사 계약의 불평등성,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이 있음.
 - 「국가계약법」과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근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관리지침상의 관련 규정 누락으로 발주기관은 공기 연장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에 부담을 갖고 있어, 시공자의 정당한 계약 금액 조정 신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음.
 - 글로벌 스탠더드와 배치되는 예산 배정 방식인 국내 장기계속공사 계약은 예산 확보의 불확실성에 대한 발주기관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오용됨.
 - 발주자의 계약적 리스크를 시공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비현실적인 현장 인력 배치 기준 등이 계약 연장 및 계약 금액 조정과 관련한 갈등을 심화시킴.

■ 총사업비관리지침의 자율 조정 항목으로 공기 연장의 간접비 및 경비 보상 근거 마련 필요

- 총사업비관리지침에는 공기 연장에 따른 계약 금액의 조정 근거를 자율 조정 항목으로 추가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한편, 일률적으로 최종 낙찰가의 10%로 규정된 자율 조정 한도를 공사 기간 및 공사 규모 등 해당 사업의 특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본고는 '공공공사 공기 연장 실태 조사와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2013. 5)의 일부 요약이며, 전체 자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장기계속공사 계약의 불평등성 보완과 계속비공사 계약으로의 조기 전환

- 장기계속공사 계약의 공기 연장 보상은 총괄 계약의 관점에서 평가 및 지급이 가능하도록 계약 금액 조정 신청 시기를 ‘최종 차수의 준공 대가 수령 전까지’로 개정 필요
 - 대등한 계약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시공 계약자가 국내 발주자를 상대로 초기 차수 연도부터 추가 비용의 보상을 신청한다는 것은 제도적 실효성이 매우 낮음.
- 현재 진행 중인 장기계속공사 중 계속비공사로의 전환이 가능한 사업의 경우 가급적 조기에 전환하는 정책이 필요함.
 - 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약 및 집행 원칙 하에서는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 반복될 개연성이 높으며, 발주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공기 연장 및 계약 금액 조정과 관련한 계약 당사자 간의 마찰과 분쟁도 지속될 수밖에 없음.

■ 공공공사의 공기 연장을 차단하는 근본 대책 마련 필요

-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해외 시장 진출을 노리는 다수 건설기업의 공정 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서라도 비효율적인 사업 수행 방식인 장기계속공사 계약 방식은 폐지되어야 함.
 - 최적의 공정 계획이 아니라 배정된 예산에 따라 공사 물량을 소화하는 장기계속공사 계약 방식에서는 선진화된 공정 관리의 필요성이 매우 낮음.
- 공기 연장시 간접비 보상 청구 금액 중 상당 부분이 현장 유지를 위한 간접 노무비 관련 항목으로, 공기 연장에 따른 인력 배치 기준 및 보상 기준의 마련이 필요함.
- 영국의 관문심사제도와 같이 사업 단계별 점검 제도를 도입하여 공기 연장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공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근본 대책도 강구하여야 함.
- 더 나아가 수직적 관계의 후진적 관행에서 탈피하여 발주자와 계약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상호 호혜적인 계약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발주기관의 인식 전환과 건설업체의 능동적인 권리 주장이 필요함.

이영환(연구위원 · yhlee@cerik.re.kr)

미국 공공공사 발주 제도의 변화 현황과 시사점*

- 제도의 다양성 및 발주자의 재량권과 책임을 중시 -

■ 배경 및 목적

- 선진국에서도 발주, 입·낙찰, 계약 및 사후 평가 체계는 계속 변화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각국의 발주 방식과 제도 전반에 대한 변화 요인으로부터 시사점을 얻기 위해 교토대학에 한국·미국·영국·싱가포르·중국 등 주요 국가들의 발주 제도를 벤치마킹하는 연구를 위탁
 - 각국 발주 제도의 벤치마킹을 통해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고, 일본의 공공공사 발주 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

■ 미국 연방정부 공공공사에 도입이 허용된 발주 방식

- 보편적으로 허용된 방식은 아래와 같이 5종류가 있음.
 - 설계와 시공 분리 발주 방식(Design-Bid-Build)
 - 설계와 시공 일괄 발주 방식(Design-Build)
 - 시공 책임형 CM 방식(CM at Risk)
 - 가교형 방식(Bridging) 및 통합 발주 방식(Integrated Project Delivery)
 - 다중 주계약자 방식(Multi-Prime)

■ 발주 방식별 도입 현황 및 변화

- 2012년 현재 발주 방식별 도입 현황
 - 미국 연방정부 조달 공사를 건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설계와 시공 분리 방식이 73%, 설계와 시공 일괄 방식은 16%, 시공 책임형 CM 방식이 6%, 분리와 일괄 방식의 혼합인 가교형 방식이 2%로, 통합 발주 방식은 통계에 포함될 정도의 비중은 아닌 것으로 확인됨.

* 2012.12.8~9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1회 국제 발주 및 계약 방식' 주제로 열린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내용 중 미국 조달청(GSA, General Services Agency) 관계자가 발표한 내용에서 발췌

- 발주 방식별 비중 변화
 - 미국던키협회(DBIA, Design-Build Institute of America)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전통적인 설계와 시공 분리 방식이 줄어드는 반면, 설계 시공 일괄 방식은 2006년 이후부터 급증하기 시작. 시공 책임형 CM 방식은 2010년 현재 금액 기준으로 아직 7% 내외인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의 발주 방식을 변화시키는 주요 동인

- 발주자의 사업관리 역량과 전문성 수준
 - 발주자의 조직 내에 지식과 경험, 조직과 인력 등이 충분한지에 따라 분리 발주로 인한 공기 지연과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위험과 책임 부담이 발주자에게 집중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주 방식과 입·낙찰 및 계약 등에 다양성을 높여가고 있음.
- 발주자의 재량권과 발주 방식별 성과와 효율성 평가 결과를 재활용
 - 발주 방식의 선택권은 발주자에게 주어져 있지만, 객관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완공된 공사의 발주 방식별 평가 결과의 반영이 보편화돼 실적에 따라 상시 변화는 불가피

■ 미국의 발주 방식 변화가 주는 주요 시사점

- 발주자의 재량권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주 방식의 다양화와 특정 방식의 제도적인 의무화나 획일적인 방식의 강제화는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음.
- 법과 제도의 완성도 및 완벽성보다는 역량과 책임성을 더 중시
 - 준공 후 공기와 공사비, 품질과 안전성 등 계량적 평가 결과를 최적의 방식과 발주자의 책임성 평가에 활용하여 발주 방식 선택시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조치
- 발주 방식 선택의 적정성 및 성과에 대한 평가 시기는 준공 이후
 - 낙찰 단계가 아닌 공기와 품질, 안전이 함께 비교될 수 있는 준공 이후 단계로 국내 공공공사의 입찰 단계 평가와는 극단적인 격차가 있음.
 - 최저가낙찰 방식에서 오는 설계 변경 빈도 증가, 준공 금액 증가, 부실과 안전 사고 증가, 약자에게 전가되는 사회적 피해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준공 이후 단계에서 평가

이복남(연구위원 · bnlee@cerik.re.kr)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5. 22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최, '자체 규제 심사'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실장 참석 -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심사 등
5. 23	청와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금융비서관실 주최, '국민경제자문회의 사전 회의'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실장 참여
5. 24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정비과 주최, '공동주택 리모델링 TF'에 건설산업연구실 운영선 연구위원 참여
5. 27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실 주최, '자체 규제 심사'에 건설정책연구실 박용석 연구위원 참여 -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2건에 대한 규제 심사 등
5. 28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정책과 주최, '거시경제 전망 TF 회의'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실장 참여 - 2013년 및 2014년 경제 전망
	이재재 · 이재영 의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재재 · 이재영 의원실 공동 주최, '경제 민주화를 위한 공공 계약 개선 방안 세미나'에 건설정책연구실 최민수 연구위원, 건설관리연구실 이영환 연구위원 주제 발표 참여 - 1주제 : '공공공사 발주자의 불공정 행위 실태와 개선 방향' (최민수 연구위원 발표) - 2주제 : '공공공사 공기 연장 실태 조사와 개선 방안' (이영환 연구위원 발표)
5. 2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석전문위원실 주최, '기획재정위원회 간담회'에 건설정책연구실 최민수 연구위원 참여 - '최저가낙찰제 및 적격심사낙찰제의 운용 실태 및 개선 방향' 주제 발표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실장 참여 - 창조경제, 사회 복지, 해외시장 진출, 경제 민주화 등에 대한 자문
5. 30	대한토목학회 / 대한건축학회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 건설산업과 좋은 일자리 창출 토론회'에 건설정책연구실 김민형 실장 참여 - '건설 기술인력 수급 실태 및 전망' 주제 발표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기준과 주최, '건설 엔지니어링 종합 평가 도입 방안 협의회 자문회의'에 건설정책연구실 최민수 연구위원 참여 - 건설 엔지니어링 업역 통합에 따른 용역 능력 평가 기준 개선 및 종합 평가 방안 마련 관련 자문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기준과 주최, '건설 엔지니어링 하도급 양성화 협의회'에 건설산업연구실 이의섭 연구위원 참여 - 연구 용역 자문
	공무원연금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운용위원회'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실장 참여 - 기금 평가 편람 변경에 따른 반영 내용 심의
5. 31	한국엔지니어링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엔지니어링데일리 창간 1주년 업계 리더 간담회'에 건설정책연구실 김민형 실장 참여 - 엔지니어링데일리 1년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 논의

‘甲’옷을 벗어던지자

한 대기업 임원이 항공기 승무원을 폭행하여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다. 그 임원은 결국 회사를 사직하고 말았다. 비슷한 시기에 한 중소기업 회장이 호텔 현관 지배인을 폭행한 사건도 있었다. 그 회장도 회사를 폐업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두 분 모두 한순간에 일터와 명예를 잃고 말았다. SNS를 타고 빠르게 확산된 여론에 무릎을 꿇고 만 것이다. 개인 입장에서 억울한 심정이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전에 탈권위주의시대를 살아가는 지혜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깊이 되새길 필요가 있다. 매사에 목에 힘을 주고 대접받으려는 이들이 점차 설자리를 잃어가는 세상이 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단순히 개인의 인격과 성품의 문제로 치부할 수도 있다. 그리고 개별 기업에 국한된 문제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우리 산업계의 고질적인 문화로 보는 시각도 있다. 뿌리 깊은 ‘갑을 의식’이 표출된 사건으로 보는 시각이 바로 그것이다.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는 갑임과 동시에 을이다. 물론 경력을 쌓아 큰 직장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오너가 되면 갑으로 변신할 것이다. 그러나, 최고의 정점에 서지 않는 한 우리는 한 평생 갑이면서 동시에 을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관계를 통하여 살아가는 인간 삶에서 어찌하면 갑을 관계는 숙명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문제는 이러한 갑을 관계에서 우리들이 표출하는 문화적 행태이다. 갑이 부당한 횡포를 부리면 을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똑같은 행동을 하고, 언젠가 높은 자리에 오른 갑은 보란 듯이 을에게 막말을 퍼붓는 그런 행태가 문제인 것이다. 먹이사슬처럼 이런 생각과 행동이 만연한 산업 생태계의 문화가 문제인 것이다.

백화점 점원이 자살하고, 본사 직원이 나이 많은 대리점 점주에게 막말을 퍼붓는 등 갑의 횡포를 알리는 뉴스가 연일 들려오고 있다. 갑을 문화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고질적 병폐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접어두고서라도 갑을 의식은 근절되어야 하는 문화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 양극화 문제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높은 위치에 있는 분, 힘 있는 분들이 쓸데없고 불필요한 갑을 의식만 자제한다 해도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따뜻해지고 통합될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갑은 많은 부당하고 억울한 오해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접을 받고 싶은가. 그렇다면 자신의 몸에 무겁게 걸치고 있는 ‘甲’ 옷을 과감하게 벗어 던져 버리자. 갑옷을 벗고 가볍게 비상하는 새들처럼 ‘乙’의 마음자세를 가져보자. <건설경제, 2013. 5. 10>

윤영선(연구위원 • ysyoon@cerik.re.kr)